

경 제 법

문 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다.
-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③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·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.
- ④ 법원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정한 과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판결을 한다.
- 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결 및 공시 과정에서 주요내용을 누락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.

문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관련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관련시장이 넓게 확정될수록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낮아진다.
- ② 시장지배적지위와 관련하여 관련상품시장은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한다.
- ③ 기업결합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.
- ④ 분양가 담합과 관련하여 신규분양 아파트와 기존아파트는 하나의 관련시장에 포함된다.
- 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타이어용 카본블랙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은 하나의 관련시장에 포함된다.

문 3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한다.
- ㄴ.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.
- ㄷ. 사업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ㄹ. 부당한 고객유인의 경우 실제로 고객이 유인되었는지 여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- ① ㄱ, ㄹ ② ㄴ, ㄷ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문 4. 유통사업자들로 구성된 연합회의 다음 행위 중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구성사업자들에게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다른 구성사업자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
- ② 구성사업자들에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영업범위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
- ③ 구성사업자들에게 연합회와 업무 제휴되어있는 물류회사와만 운송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
- ④ 구성사업자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
- ⑤ 구성사업자들에게 사실이 아님에도 ‘대한민국 유통대상 수상’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

문 5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.
- ㄴ.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.
- ㄷ.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가 수 회 반복되었다면 동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개별적 합의가 수 개 존재한다고 본다.
- ㄹ.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
- ③ ㄱ, ㄹ ④ ㄴ, ㄷ
- ⑤ ㄷ, ㄹ

문 6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추정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.
- ㄴ.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- ㄷ.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,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, 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추정한다.
- ㄹ.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점유율만 가지게 되어도 경쟁제한성을 추정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ㄹ
- ③ ㄴ, ㄷ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문 7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위탁매매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.
- ② 가격측면에서의 수직적 거래제한이다.
- ③ 경쟁자의 판촉활동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행해질 수 있다.
- ④ 권장소비자가격이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을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경쟁촉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.

문 8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의 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’ 중 ‘정당한 이유없이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외형상 이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.
 ㄴ. 경영상 또는 거래상 필요만으로 ‘정당한 이유’가 인정된다.
 ㄷ. 입증책임에 있어서 ‘부당하게’와 차이가 없다.
 ㄹ. 공동의 거래거절은 이 행위유형에 해당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ㄴ, ㄷ
- ④ ㄴ, ㄹ ⑤ ㄷ, ㄹ

문 9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규모회사가 임원겸임을 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.
- ② 주식취득의 경우 주식취득의 계약합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들 사이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- ⑤ 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문 10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끼워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은 별개의 상품이어야 한다.
- ② 거래강제행위의 한 유형이다.
- ③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.
- ④ 프린터에 잉크를 끼워파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다.
- ⑤ 대형마트에서 콜라와 사이다를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.

문 1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지주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2년간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.
- ②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.
-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.

문 1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동의를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동의를결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진행될 수 있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동의를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결을 하지 않는다.
- ④ 사업자가 동의를결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⑤ 동의를결은 시정조치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.

문 13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진신고자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어야 한다.
- ②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자가 아니어야 한다.
- ③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여 수 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.
-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만이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⑤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.

문 14. 「소비자기본법」상 단체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②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의 직접성과 계속성이 요구된다.
-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.
- 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면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문 15. 「소비자기본법」상 자율적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.
 ㄴ.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설치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.
 ㄷ. 분쟁당사자가 자율적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
 ㄹ. 분쟁당사자가 자율적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
 ④ ㄴ, ㄹ ⑤ ㄷ, ㄹ

문 16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.
 ③ 다단계판매업자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한다.
 ④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.
 ⑤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.

문 17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
 ② 재화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야 한다.
 ③ 청약이 철회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반환의무와 통신판매업자의 대금환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 ④ 거래당사자가 철회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약정한 경우라도 소비자는 법정 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 ⑤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 외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청약철회의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.

문 18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농가로부터 김장용 배추 200포기를 구매하면서 구매 대금을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계약
 ②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6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계약
 ③ 냉장고 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, 냉장고는 계약체결 즉시 인도받기로 한 계약

- ④ 컴퓨터 구매 대금을 2개월 내에 3회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, 컴퓨터는 대금완납 후 인도받기로 한 계약
 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 대금은 6개월 동안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의 형태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계약

문 19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할부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②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.
 ③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업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.
 ④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.
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
문 20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.
 ②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
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직접 마련할 수 있다.
 ④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⑤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.

문 21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‘약관’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을 말한다.
 ②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다.
 ③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된다.
 ④ 불공정약관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삭제,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.
 ⑤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 약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.

문 22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과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?

- ① 청약철회 규정
- ② 형사처벌 규정
- ③ 포상금 지급 규정
- ④ 계약서 발급의무 규정
- ⑤ 과징금 규정

문 23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목욕탕에 게시된 “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,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”라는 유일조항
- ② 공공사업자의 전기·가스 공급규정
- ③ 이동통신서비스 거래약정서
- ④ 편의점 가맹계약서
- ⑤ 상가를 특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

문 24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.
- ②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명시 의무 외에 교부의무도 부담한다.
- ③ 고객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.
- ④ 사업자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면 원칙적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.
- ⑤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·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상법의 취소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에 근거하여 위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.

문 25. 「소비자기본법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사업자에 대한 형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.
- ②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권한은 한국소비자원장에 있다.
- ③ 물품을 소비생활이 아닌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.
- ④ 사업자는 시험·검사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한다.
- ⑤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.

법 철 학

문 1. 플라톤(Platon)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정체를 선호하였다.
- ② 참된 지식은 법률과 명령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.
- ③ 당시의 아테네 배심재판보다 경험 많고 분별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지지하였다.
- ④ 정의는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신이 좋아하는 것이지, 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.
- ⑤ 후기 저서 『법률』에서 통치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시민의 무조건적 복종행위를 비판하였다.

문 2. 아리스토텔레스(Aristoteles)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, 행복은 덕(arête)을 행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.
- ② 국가의 통치계급은 중용의 덕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.
- ③ 사물을 이해하는 데 목적론적 사고를 중시하였다.
- ④ 시민의 공적 활동을 위해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.
- ⑤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윤리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.

문 3. 아퀴나스(T. Aquinas)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간의 악행과 죄악은 무지가 아니라 의지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.
- ② 법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라고 보았다.
- ③ 자연법은 이성을 통한 본성의 실현을 명하는 것이고, 실정법은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
- ④ 법은 규칙과 저울이기 때문에,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지성의 산물이라고 보았다.
- ⑤ 신법(神法)에 어긋나는 인정법(人定法)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.

문 4.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?

- ① 아리스토텔레스(Aristoteles) - 인간은 완전한 경우에는 동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만, 법과 정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존재이다.
- ② 키케로(Cicero) - 인정법(人定法)은 “타인을 해치지 말라.”, “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.”는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.
- ③ 아우구스티누스(Augustinus) - 지상의 국가는 인간의 원죄에서 파생된 필요악이다.
- ④ 몽테스키외(Montesquieu) -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이다.
- ⑤ 오스틴(J. Austin) - 법학의 대상은 ‘있는 법’이 아니라 ‘있어야 할 법’이다.